

‘보행로 없고, CCTV 오류’ 광주 스쿨존 관리 허점 드러나

광주시 감사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 137곳 대상 특정감사
 253건 위반 적발...보행로 미확보·횡단보도 표시 미흡 등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곳곳이 관리상 허점을 드러냈다.

보행로가 아예 없거나 폐쇄회로(CC)-TV 프로그램 오류도 적지 않았다.

5월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16일부터 3월26일까지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588곳 중 최근 4년 새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61곳을 포함해 137곳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모두 2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민

식이법’과 같은 해 11월 북구 운암동 스쿨존 네모너 교통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 번 높아지면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실시됐다.

시와 5개 자치구, 경찰, 시민감사관이 합동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횡단보도 표시와 신호등 설치 미흡한 사례가 116건에 달했고, 다음으로 ▲과속 또는 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 미설치 15건 ▲보호구역 구간 시·종점 표시 부적정 22건 ▲해제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방치 27건 ▲

도로 노면표시 등 노후화 73건 등이다.

특히, 보행로 미확보로 어린이교통사고가 빈번한 광산구 송정초교 주변 등 9곳에 대해서는 일방도로나 보행자 우선구역으로 지정토록 해 어린이 보행 환경을 대폭 개선했다.

주정차 단속 CC-TV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반구역으로 잘못 인식해 2억8600만원의 과태료가 과소 부과된 사실도 시정 조치됐다.

범죄예방용 CC-TV를 주정차 단속 CC-TV와 공동 활용토록 하고,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지주대를 통합 설치·관리토록 해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이갑재 시 감사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미래 주인공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



장애 주는 가장 중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어린

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오늘부터 백신 한 번만 맞아도 ‘8인 가족 모임’ 인원 수 제외

방역당국, 적용...경로당·복지관 등 접종자 중심 프로그램 재개



6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1회만 참여해도 8명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백신을 맞은 사람을 포함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앞서 5월 26일 방대본이 발표한 이번 방안은 오는 10월까지 단계적으로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경우 모두 1인당 2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

6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 가족 내 접종자가 많을 수록 모임 수 있는 사람 수도 더 많아진다.

단, 1차 접종자는 백신을 맞은 후 14일이 지난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정부는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 특히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으로만 소모임을 구성한 경우, 노래교실과 관악기 강습도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면회객이나 입소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

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 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다만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나 접종 미완료 종사자는 계속 검사한다.

예방접종에 참여한 사람은 각종 문화 혜택을 받게 된다. 6월부터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도 제공한다.

정부는 오는 7월 예방접종을 증명하는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해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제고한다.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월 3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예방접종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또 우리 모두의 일상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형질 무단 변경 기성용父子 땅 복구 미흡

해당 농지 폐아스콘 불법 포장
 차고지 전용...원상 복구 명령
 기한 직전 당국 조사 “미흡” 결론

프로축구 서울FC 주장 기성용(32)과 아버지 기영옥(62) 전 광주FC 단장이 가짜 영농 계획서로 사들인 농지의 형질을 불법 변경한 것과 관련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관할 자치구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관할 자치구는 기한을 하루 앞둔 조사에서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토지 수준으로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후속 행정 조치 검토에 나선다.

광주 서구는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서구 금호동 내 기씨 부자 소유 농업용지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당초 기씨 부자의 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 형질이 원상 복구됐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형질 변경은 깎아내기, 쌓아 올리기, 평탄화,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바꾸는 행위로, 관할 자치구 인·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씨 부자는 별다른 허가 절차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상 ‘갯을 재배하겠다’던 농지 중 일부에 주차가 편리하도록 형질을 무단 변경했다.

해당 부지 9610㎡(8개 필지)에는 차량 통행이 용이하도록 페아스콘이 노면에 깔렸다. 이

후 중장비 차고지로 쓰이면서 자연스레 표층이 다져졌다.

기씨 부자의 농지 불법 전용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서구는 앞서 지난달 무단 형질 변경된 토지를 이날(2021년 5월31일)까지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현장 조사에 나선 서구청 경제과는 토지 위치도(위성사진 촬영도), 무단 형질 변경 전후 지적도 등과 실제 복구 공사 현황을 대조했다.

복구 상황을 가능할 수 있는 각 위치별로 사진도 촬영했다. 한 공무원은 인근 야트막한 언덕에 올라가 복구 상황을 살폈다.

조사를 통해 서구는 ‘작물을 심을 수 있는 토지’ 수준으로 충분히 복구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한이 이날까지인만큼 다음날(6월1일) 오전 다시 현장을 방문해 최종 이행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구는 최종 현장 조사에서도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의 복구가 미진할 경우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기씨 부자에 대한 수사도 두달 여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취재본부

순천시

생태와 도시를 이어주는 곳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순천 3E프로젝트

생태
교육
경제